

# 전기 1%만 아껴도 캐시백... 주말 낮 사용하면 요금 할인

기후부, '슬기로운 전기생활' 확대  
에너지캐시백 기준 3%→1%로 완화  
절감률 따라 최대 120원/kWh 차감  
피크시간 절감 땀 500원/kWh 보상  
주말 낮 스마트가전·전기차 할인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변화한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소비 효율화 대책을 대거 내놓았다. 앞으로 전기를 아낀 만큼 요금을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이동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센티브 제도가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기로운 전기생활' 확산을 위해 7월 1일부터 다양한 소비자 혜택 사업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의 확대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지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을 기존 '3% 이상 절감'에서 '1% 이상만 절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급 단가 역시 대폭 인상돼, 절감률 구간에 따라 1킬로와트시(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kWh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평일 저녁 피크 시간대(17시~20시)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아끼면 파격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7~8월 두 달간 원격검침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전 2개월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전력을 절감할 경우, 1kWh당 500원의 캐시백

(지급한도 1만원)을 돌려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반대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해 전력이 남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11시~14시)에는 '전기를 쓰면 혜택을 주는' 역발상 정책이 추진된다. 가정에서는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SmartThings)나 LG전자(ThinQ)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사용하면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산업계와 전기차 이용자 역시 낮 시간대 전력 소비 유인 혜택을 받는다. 9~10월 두 달간 산업용(을) 전력 소비 기업들은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 또한 동 기간 주말 낮에 공공 급속충전기나 자가소비용 충전소 등에서 충전 시 요금 할인을 받는다. 아울러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을 늘려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플러스디알(DR)'

제도를 활용하면 지정 한국전력 충전소 기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 최대 12%까지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충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전력 서비스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39종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출산가구 등의 전기요금 복지할인(7~8월 한도 월 최대 2만 원 확대)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유연하게 전력사용을 조절하는 문화를 확산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야간노동자 건강 빨간불... 정부지원 착수

고용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야간 특검 128만명 중 23% 이상소견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원

야간직업자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4명 중 1명으로 심혈관계나 신경계 등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가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300인 미만 중소·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야간직업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야간직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야간직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128만명 중 무려 23%에서 심혈관계, 신경계 등 주요 장기에 이상 소견이 확인돼, 야간직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야간 노동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 야



오후 9시 이후 심야 택배 배송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간 특검 유소견자 발생 비율이 높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부동산업(아파트·건물경비), 운수창고업(택시·버스운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요양병원), 택배업 등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공단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교대·야간근무 형태, 연속 야간일수, 휴게 및 사이잡 운영 여부, 대체인력 및 관리 감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조도와 온도, 수면실·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전반을 살펴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자 개인을 위한 사후관리도 촘촘해진다. 공단은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야간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에게 1대 1 맞춤형 건강상담, 수면장애 및 피로도 평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증상이 심각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전문가 진료를 연계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노동자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에는 '교로사예방센터(가칭)'를 신설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야간직업 노동자는 교대제와 장시간 근로, 수면 부족 등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중소사업장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이상자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1년 대기 줄인다

근로복지공단, 내달 특진의료기관 운영  
전국 83개 병·의원서 정밀검사 가능

산업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으로 산재 신청 후 장애급여를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재해 노동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대폭 단

축한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특성상 고령 노동자의 신청이 몰리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 7182건 ▲2024년 2만 1247건 ▲2025년 2만 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급증했다.

반면, 법령에 따른 정밀 청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는 데만 평균

234일이 소요됐으며, 최종 장애급여 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374일에 달했다.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고 산재를 신청해도,공단병원이나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 지정된 곳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 극심한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능사, 정밀 청력검사 시설과 장비 등을 고루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국 83개소를 특진의료기관으로 새로 인증했다. 앞으로 이들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 기준에 맞춰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신뢰도에 대한 의학자문만 거치면 장애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KIAT, 대경권서 5극3특 포럼 마무리

대구 엑스코서 대경권 전략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대구·경북(대경권) 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권역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소통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IAT는 지난 26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대경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합쳐 이르는 말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다극체제 개념이다.

이번 대경권 포럼은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첨단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산업지도의 다

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릴레이 현장 간담회다. KIAT는 앞서 서남권(10일)을 시작으로 제주(19일), 강원(23일), 동남권(23일), 중부권(25일), 전북(25일)을 거쳐 이번 대경권 포럼을 끝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완수했다.

전용중 KIAT 원장은 "이번 첨단산업과 제조기술의 기반을 동시에 보유한 대경권을 끝으로 릴레이 포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그간 권역별로 성장엔진 발굴과 육성에 다양한 의견을 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5극3특 지원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가중요시설 지킬 대드론 표준 첫 마련

국표원, 29일 대드론 KS 제정 고시  
레이더·RF스캐너 등 시험방법 규정

최근 글로벌 전쟁과 테러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위협이 급격히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그간 성능평가 검증이 어려워 장비 도입에 난항을 겪던 보안 시설의 안보 공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미확인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6월 29일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KS W 8100(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 레이더, RF스캐너, EO/IR카메라, 제

머)'으로,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들이 드론에 대한 탐지 능력과 범위, 식별 정확도 및 무력화 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 등을 통해 드론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나, 국내 국가중요시설들은 대드론 체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표준이 없어 장비 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이번 KS 표준을 토대로 대드론 체계 인증제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대드론 표준과 인증제도는 '국가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안보 공백 해소는 물론, 초기 단계인 국내 대드론 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